

나주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삐걱'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를 이끌어 나갈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혁신도시 시즌2'를 총괄할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을 놓고 전남도와 광주시의 상생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17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9년 8월 출범을 목표로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재단 출연금과 운영비 부담안을 놓고 전남도와 광주시의 이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국 각 10개 혁신도시 별로 재단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지만 나주혁신도시는 양 시·도의 이견 때문에 재단설립 시작 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현재 광주 시·전남도·나주시가 혁신도시 주관 조직을 따로따로 운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고, 혁신도시와 관련된 중장기적인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 이진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될 재단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공동 이사진을 맡고, 이사 13명, 비상감사 시·도 각 1명, 원장 사무국장, 6개팀 20명 정원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재단설립을 위해서는 기본 재산 20억원을 마련해야 되고 초기 운영비 10억원을 확보해야 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기본 재산 20억원은 지자체와 16개 이진 공공기관이 비율에 따라 출연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조성될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또 운영비 10억원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5억원, 전남도 5000만원, 광주시 5000만원, 공동발전기금 4억원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재단설립에는 공감하지만, 기본재산과 운영비를 지자체와 이진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 한 이후 기금에서 100%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혁신도시 이진 공공기관 16곳에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공동발전기금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출연금을 내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7월에 일괄 발송한 이후 이진 기관들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이진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이후 재단설립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면서 "공동발전기금

전남도 "출연기금 등 공동 부담해야"

광주시 "공동발전기금'으로 충당해야"

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출연금 분담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양 시·도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공동발전기금'은 이르면 내년 후반기께나 순차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동발전기금' 조성 순연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진 공공기관들로부터 거둬들이던 지방세 수입보다 혁신도시 관리에 투입된 재정 규모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남도와 나주시는 2014년부터 4년간 나주혁신도시에서 이진 공공기관들로부터 지방세(도·시세) 537억3000여만원을 거둬들였지만 혁신도시 관리와 운영 등에 1575억9400여만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로 따지면 이 기간 동안 지방세 수입대비 '1039억6400여 만 원'이 마이너스 난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양 시·도 간 이견은 또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혁신도시 유지 이후 작성했던 '공동발전기금 조성 협약서'에 기금은 '이진 공공기관들로부터 거둬들이던 지방세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 이후 전남도와 나주시가 민간에서 거둬들이던 '부동산 취득·등록세'가 수백억원에 달하자 광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이익 공유를 내세우며 전남도와 나주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매년 혁신도시

관리에 160여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에 따른 민간에서 거둬들이던 지방세 수입은 한시적이었고, 수입의 대부분이 혁신도시에 재 투자됐다"며 "지방세 전액을 기금 조성에 내 놓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나주시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이진 공공기관들이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지방세(재산세)를 면제 받는다는 2023년까지 추가로 3년간 지방세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유에서다.

나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혁신도시 내 도로 교통, 상·하수도, 공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연평균 20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대비 관리·운영비 지출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동발전기금 출연 규모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서은홍·김정환 기자

숙박시설에 딸 버리고 도주한 30대 여성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아이를 숙박시설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로 A(31·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에 광주 서구의 한 무인텔 객실에서 태어난 지 6개월된 딸을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양을 보낼 딸에게 필요한 물품을 챙기기 위해 아이를 홀로 보냈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겁이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을 무인텔에 방치한 채 최근까지 머물렀던 경남의 한 미혼모 지원시설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딸을 키울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내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아이 물품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다른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어 경찰 연락에 겁이 나 잠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지수 의사를 밝혀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A씨의 딸의 입양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별 통보에 전 여친 흥기 위협 3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헤어지려 하는 여친친구를 흥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40분에 광주 서구 지평동 B(24·여)씨의 원룸 현관문에서 흥기를 들고 10여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 동안 만난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흥기를 발견한 B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폐지준던 70대 노인 가방 훔친 4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폐지를 준던 70대 노인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A(48)씨를 붙잡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 한 고물상임구에서 B(73·여)씨가 쌓아둔 폐지 더미 위에 놓인 현금 5만5000원·휴대전화(70만원 상당) 등이 든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주변 골목에서 폐지를 더 줍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훔친 손가방 안에 든 현금은 B씨가 수일 동안 주운 폐지 1.5g 가량을 판매하고 받은 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주인이 버린 가방이라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주기 위해 가방을 집에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작업용 면장갑을 끼고 있는 점을 확인, 주변 공사장과 공장 등지에서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일당 무더기 검거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러시아인 브로커와 인력사무소장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국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인력사무소장 A(58)씨와 브로커 러시아인 B(48)씨 등 1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단기방문 등의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260여명을 총 870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복지(F-4)로 입국한 B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A씨의 소개로 건설현장 등에 일하면서 동해항으로 입국한 관광무사증 러시아인을 16회에 걸쳐 경기도 화성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취업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불법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



따뜻한 겨울나기 17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식품과 생활용품을 포장하고 있다.

'정규직화 요구'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조 파업 돌입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 노조가 17일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 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도를 선포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국립대병원인 전남

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높았지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발표해 놓고 뒷집을 지고 있고, 공익을 우선 해야 할 전남대병원은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노조는 파업에 나선다"며 "병원이 직접 대체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보여 대체인력 투입시기에 맞춰 근로현장에서 투쟁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문 앞에서 생색만 내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직접 투쟁을 통해 정규직을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 측이 오는 31일까지인 재계약 기한 내에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상 연내 정규직 전환은 어려워졌다"고 판단, 파업에 나선다"며 "병원이 직접 대체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보여 대체인력 투입시기에 맞춰 근로현장에서 투쟁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